

광주·전남 현안 법안 줄줄이 폐기·변질 위기

“17대 국회 처리 총력전 펼쳐야”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법안들에 대한 17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거나 변질될 가능성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핵심 법안들이 17대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다 한나라당의 다수당 지위 확보가 예상되는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대 핵심법안(F1 특별법, 여수엑스포 지원법, 낙후지역 특별법, 광주과기원법)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법안은 여수엑스포 지원법에 불과하며, 그나마 변질·축소된 채 통과될 전

망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3~4일 정도로 짧게 짜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3월부터는 총선 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 광주·전남지역 핵심 법안의 17대 국회 처리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선 F1 특별법(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문공위에 계류된 상태며 상임위를 열어 법사위 상정 여부를 논

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경주법’(세계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 상정 및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남 서남권 개발의 근거가 되는 낙후지역 특별법(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과의 병합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핵심 법안들의 17대 국회 통과를 위해 총선 정국을 떠나 지역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수도조성위 존치

국가균형발전위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문화도시조성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등이 존치된다.

〈관련기사 4면〉

새정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폐지 방침은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축소로 연결돼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 축과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이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존폐 문제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조성위 폐지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타결된 위원회 존폐안에 따르

면 균발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각각 협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수산식품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반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토정책위원회·청년실업대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등은 폐지된다.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뒤늦게 나마 문화도시 조성위 존치를 결정한 것은 문화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며 “새 정부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6인 협상’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고 27~28 양일간 신임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은 3월 초에 가능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일·여성부 살았다

‘15부 2처’ 정부조직개편안 타결

해수부는 폐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양보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관련기사 3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한편 과거사 관련 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존치하고 특임 장관을 1인으로 하기로 합의, 새 정부 내각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으며 총 국무위원 정수는 16명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명칭은 여성부로 바꾸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폐지,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사무소 등으로 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다.

정해졌다.

용할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정부조직개편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 자신의 임기 중 정부로 이송돼 경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